제 303회 시의회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주 요 업 무 보 고

20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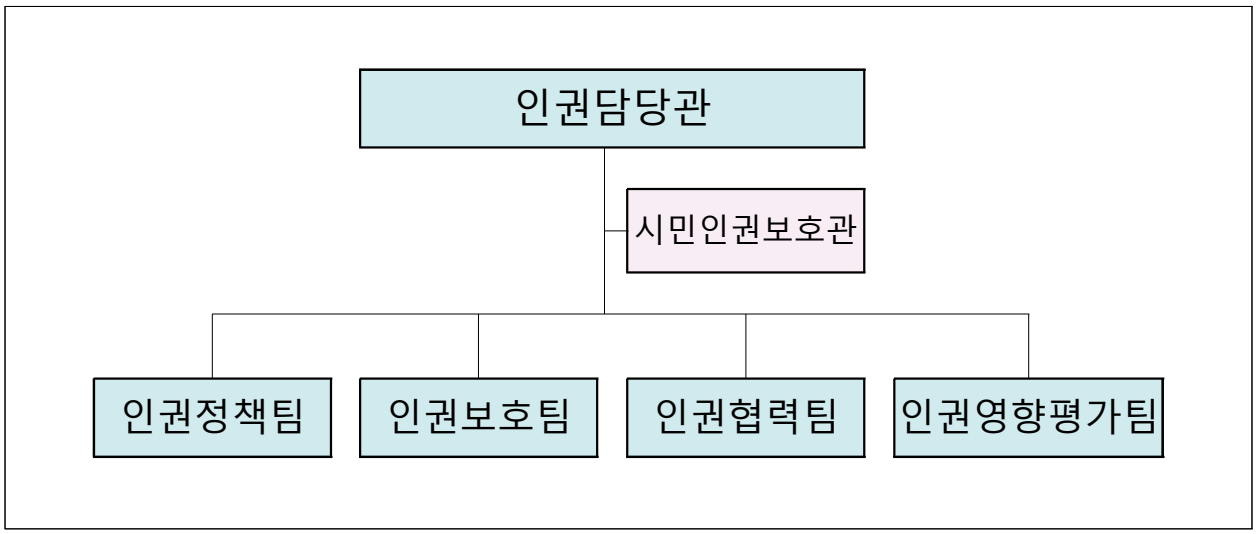
인권담당관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 1담당관 4팀

□ 조 직

('21. 10. 8. 기준)



□ 인 력(현원/정원)

('21. 10. 8. 기준)

구 분	계	행 정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정 원	22	17	1	3	6	7	–	–	–	5	4	1
현 원	21	16	1	3	5	7	–	–	–	5	4	1
증 감	△1	△1	–	–	△1	–	–	–	–	–	–	–

2 예 산

('21. 10. 8. 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현액	집행액(9.31.기준)		집행률(%)		'21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	원인행위	지출	예상액	집행률(%)
합 계	1,356,653	1,191,937	787,987	88	58	1,322,974	98
사업예산(계)	1,299,961	1,138,878	734,928	88	57	1,267,974	98
인권담당관	1,299,961	1,138,878	734,928	88	57	1,267,974	98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75,693	135,477	130,710	77	74	172,179	9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0,100	41,050	41,050	68	68	54,090	90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52,560	30,000	30,000	57	57	52,000	99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8,788	367,184	203,053	94	52	381,012	98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62,800	30,000	30,000	48	48	62,800	1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7,200	153,200	91,964	97	59	150,900	96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4,720	50,470	37,920	92	69	53,626	9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52,000	152,111	150,311	99	99	152,111	99
서울 인권 컨퍼런스	111,280	104,436	4,320	94	4	104,436	94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10,000	10,000	56	56	17,820	1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7,000	64,950	5,600	97	8	67,000	100
행정운영경비(계)	56,692	53,059	53,059	94	94	55,000	97
기본경비	56,692	53,059	53,059	94	94	55,000	97
기본경비(인권담당관)	56,692	53,059	53,059	94	94	55,000	97

3 팀별 주요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인 권 정 책 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조례, 규칙 등 법·제도 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 ◦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운영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 ◦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추진 ◦ 인사, 조직, 국회, 시의회, 예산, 회계 등 서무업무
인 권 보 호 팀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 관련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사건 통계 관리 ◦ 인권침해사항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 ◦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 활동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인권메뉴얼 적용 전파 및 점검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무료법률 상담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인 권 협 력 팀	◦ 인권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활용 ◦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운영 ◦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관리
인권영향평가팀	◦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 인권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제도적 안정화 추진 ◦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개발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 인권문화행사 개최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4.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5.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1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 인권적 관점의 정책 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 환경 지속 조성
◆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포용도시 서울」 실현

☐ 추진방향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서울시정 자문 및 비(非)인권적 정책 개선 권고 활성화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한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준비

○ 다양한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현안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

☐ 추진실적

○ 市 인권정책의 심도있는 자문을 위해 인권위원회 운영: 9회

– 인권정책 시행계획 등 자문(17건), 재난상황 아동 공적돌봄 개선을 위한 권고 등(4건)

– 「코로나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인권포럼 개최(4월, 2,500명)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안정적 실행 및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준비

– '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환류(3월)

– 제2차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시행(5월~11월)

○ '21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실태조사 중(7월~12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0.8.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1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60,100	41,050	41,050	68	68	54,090	9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7,200	153,200	91,964	97	59	150,900	96

☐ 향후계획

○ 인권위원회 개최 : '21.12월

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안정화로 구제의 효과성 제고
◆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내실화로 市 인권보호 체계의 시민 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정례적 운영 및 권고이행 관리 강화

○ 시민참여를 통한 배심원제 운영 및 인권지킴이단의 현장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2021년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조사 실시 ('21.9.30. 기준)

상담 건수			조사 건수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계	조사중	권고	기각·각하 등
714	127	587	151	54	19	78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11회), 시민인권배심원제 회의 개최(4월)

– 의료비, 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5개 단체, 149백만원)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등 운영으로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 정비구역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 24회, 41가구

– 인권침해 경각심 제고를 위한 인권침해결정례집 발간·배포(7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0.8. 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1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운영	52,560	30,000	30,000	57	57	52,000	99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	10,000	10,000	56	56	17,820	10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52,000	151,111	150,311	99	99	151,111	99

□ 향후계획

○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21.10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최종평가 : '21.12월

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 시 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행정 구현
◆ 시민 대상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

□ 추진방향

○ 시 본청·산하 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

○ 인권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단체에 인권교육·연구 등 사업비 지원

○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를 통해 역사 현장 보존 및 탐방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추진실적

○ 市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 진행(26회, 32,069명 이수) 및 모니터링 실시(21회)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37명) 및 교육용 콘텐츠 제작(5편)

○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등 10개 단체 150백만원 지원
- 사업수행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 점검(7.5~7.30)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 온라인 탐방 실시(8회 230명), 온라인 탐방영상 2편 제작(구로길, 전태일길)
- 바닥동판 1개 설치(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0.8. 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률(%)		'21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88,788	367,184	203,053	94	52	381,012	98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175,693	135,477	130,710	77	74	172,179	98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4,720	50,470	37,920	92	69	53,626	98

□ 향후계획

○ 인권아카데미 등 인권교육 실시 : ~ '21.12월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바닥동판 설치 : ~ '21.12월

4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

◆ 시민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예방·개선하여 인권친화적 행정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市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추진

□ 추진방향

○ 행정업무 추진시 시민 인권에 미칠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 최소화

○ 市 산하 투·출 기관의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평가 및 지도·점검 실시

□ 추진실적

○ '20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를 반영한 지침·편람 개정 추진

– 총 297개 지침·편람 평가 후 33개 지침·편람(42개 항목) 개정사항 권고('21.3월)

– 22개 부서 28개 지침·편람(36개 항목)의 개정 수용 후 개정 추진

○ 재난 매뉴얼(60개) 및 건축·시설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용역 진행 중

– 재난상황 시 취약계층 우선적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및 공통가이드라인 개발

– 3개 건물군(복지/문화/교육) 12개 시설 시범평가 후 분야별 점검표 보완·개발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및 인권경영 지도점검 추진

– 출연기관 '20년 실적 평가(6월) : 20개 기관 평균 0.87점(1점 만점)

– 투자·출연기관 '21년 이행사항 지도점검(26개소), 신설 기관 컨설팅(3개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0.8. 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1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7,000	64,950	5,600	97	8	67,000	100

□ 향후계획

○ 市 공공 건축시설물 및 정책·사업 평가 : ~ '21.12월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실시 : ~ '21.12월

5 인권존중문화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인권주체 간 교류 · 협력 증진으로 글로컬(Glocal) 인권도시 구현
◆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통해 보편적 인권의 가치 실현

□ 추진방향

○ 인권 콘퍼런스와 문화 행사 개최로 인권가치의 시민사회 확산 및 인권감수성 제고

○ 국내외 인권 이슈 등 공유를 위한 '인권의 장' 마련으로 협치 네트워크 강화

□ 추진실적

○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

– 인권도시 서울 홍보를 위한 「2019-2020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8월)

–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 웹툰 제작·홍보

○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개최(9월)

– (광역) '강제철거·인도집행 현장의 인권과 지자체의 역할' 논의

– (자치구)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현황' 공유

○ 인권가치의 시민사회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권행사 개최

–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주제: 코로나19 넘어, 미래인권을 말하다) 개최(12.6~7, 다목적홀) 준비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2021 인권문화행사」 개최(12.10) 준비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10.8. 기준)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1년말 집행예상액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 인권 콘퍼런스	111,280	104,436	4,320	94	4	104,436	94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62,800	30,000	30,000	48	48	62,800	100

□ 향후계획

○ 서울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 '21.12월

붙 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인권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	4	4	-	-
	시정·처리요구사항	6	2	4	-	-
	건 의 사 항	2	2	-	-	-
	기타(자료제출 등)	-	-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table>
<tr><th>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th><th>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 인권교육은 조례상 의무교육인 만큼 성과목표를 기존 수치인 60%보다 상향 조정이 필요함.
(인권담당관)</td><td>□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성과목표(인권교육 이수율): 매년 상향 조정
<table><tr><th>구 분</th><th>'20년</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비고</th></tr><tr><td>공무원 등 인권 교육 이수율</td><td>60%</td><td>65%</td><td>70%</td><td>75%</td><td></td></tr></table>- 성과목표(인권교육 이수율) 산정 대상은 서울시공무원을 포함하여 서울시 산하 기관(단체) 소속 직원 및 위탁기관·복지시설장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50,507명)으로
- 코로나19 확산(지속)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율 목표를 '20년도 60%, '21년 65%로 설정하였으며, '22년 70%, '23년 75%로 매년 상향 조정할 계획임.
- 향후 비대면 교육(온라인, 실시간 원격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 이수(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교육 이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2021년 인권아카데미 운영: ~'21년 12월</td></tr>
<tr><td>○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인권지킴이단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시켜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람
(인권담당관)</td><td>□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공무원 3, 변호사 1명임.
- 공무원들은 시 단체보험(생명/상해)에 가입되어 있으나
- 변호사의 경우 2017년, 2020년 보험가입을 보험사와 협의하였으나, 단체보험의 경우 일정한 급여가 없는 2종 단체인 점, 가입 규모 미달인 점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이 불가한 상황임
□ 향후계획
○ 현장에서 경찰, 집행관의 통제하에 진행하며
○ 과도한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 집행관에게 현장 인계 등 안전조치 시행</td></tr>
</table>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권정책회의가 조례에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정책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점은 조례 위반임. 회피성 답변보다는 인권 관련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함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17년에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협의조정을 위해 인권정책회의 개최함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실국 간 협의·조정하는 인권정책회의 개최 : '22년 상반기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가지는 구조적 문제 개선·보완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6년에 공정한 결정을 위해 운영방식을 독임제에서 합의제(위원회제)로 개선함 - 상임시민인권보호관(임기제공무원 3명) : 조사 + 의결 -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외부위원 7명) : 의결 □ **향후계획** ○ 유사사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검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권무료법률상담에 있어 상담인력 운용 및 상담 처리에 대한 관리 미흡. 인권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2014년 이후 크게 변동이 없고 변호사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보완사항이 없음. 또한, 상담 유형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상담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요망됨.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권법률상담 전문변호사 2명 추가 위촉('21.6월)하여 현재 7명 활동 중이며 3명 재추가 위촉을 위해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중 ○ 법률상담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기존 시행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전화상담으로 전환함에 따라 잠정 중단('20.2월부터)하였으나 방문상담 전환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재개 □ **향후계획** ○ 인권무료 법률상담 상시 운영
○ 인권법률상담 변호사 8명중 1명은 스스로 포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보완사항이 없음 보완하기 바람. 다른 변호인단도 2014년 이후 변경이 거의 없음. 시민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 홍보도 없고 사업자체가 정체되어 있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권법률상담 전문변호사 2명 추가 위촉('21.6월)하여 현재 7명 활동 중이며 3명 재추가 위촉을 위해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중 ○ 「서울시 인권침해 구제안내」 리플릿에 인권법률상담 제도 안내 수록하여 홍보 추진 중 □ **향후계획** ○ 인권무료 법률상담 상시 운영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인권경영 평가 대상기관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市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현항 점검 : 3회 - 2020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 '21.6월 -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2회) : '21.8월, 10월 □ **향후계획** ○ 2021 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 '22.3~6월
○ 공무직 호봉산정 관련 권고처럼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공무직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결과 -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 이행 완료 - 시간선택제 임기제 경력인정 차별 : 이행 완료 □ **향후계획** ○ 향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권고하고 이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